

ISSUE & FOCUS

Newsletter 2017-3(4)

청년들이 대한민국 창업을 기피하는 몇 가지 이유

정원석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前 나라스페이스 대표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I. 배경

높은 청년실업과 글로벌 경기침체,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등의 흐름을 토대로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부터 활발한 청년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가 설립되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등 다양한 지원을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 고취를 비롯해 바람직한 성과가 이어졌으나 한 가지 염려되는 면이 있다.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단순히 질적인 요소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 창업과정을 저의 거쳤던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연구 하는 창업분야 관련 정책 구상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간략히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II. 現 창업제도의 문제점

대부분의 한국 내 창업제도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서부의 실리콘밸리와 동부의 보스턴, 그리고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 등은 적극적인 스타트업 정책을 펼쳐 세계 창업열풍을 집중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제도를 안착시키고자 대한민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청년창업지원책을 수립 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과거 수 년 전에 비해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 청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화려한 하드웨어에 미치지 못하는 미비한 소프트웨어(창업문화 및 기초교육제도), △정부 부처의 관료주의적 관성에 의한 극심한 비효율성, 그리고 △감시시스템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정부지원금 사냥꾼들의 출현 등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창업열풍에 큰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III. 문제점 집중분석

1. 미비한 소프트웨어(창업문화 및 이종인재 교류)

(1) 공존 개념이 없는 창업문화

기본적으로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경쟁’에 초점이 맞추어진 12년 공교육 제도를 경험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승패가 명확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교육제도와 문화에만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정작 창업(특히 동업)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협업능력과 장기적 시각에 기초한 협력구축 등에 대한 관념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해외 주요 선진국들 내에서도 스타트업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점은 사실이다. 그와 동시에 업종 간 협업문화와 윈-윈 전략탐색, 그리고 Reference Check등이 매우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에티켓이 발달되어 있는 문화적 틀 내에서 선진국 내 인재들은 경쟁을 도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왜곡된 경쟁의식이 많은 창업기업들을 위기로 몰아넣거나 심지어는 잠재성도 발휘하지 못한 채 공중 분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 나아가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집단지성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 창업가들이 정작 그러한 성격의 정보교류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필요한 정보만 빼가는 소위 ‘먹튀’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창업의 실무적인 방법론을 가르치기 이전에 예비 청년창업자들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창업 마인드를 심어주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공존 문화가 잘 자리 잡은 선진국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이러한 문화적 토대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창업 생태계의 긍정적인 효과와 인식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미비한 이중인재 교류

창업사관학교 등 기초적인 창업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현 정부지원제도는 어느 정도 안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창업과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방법론적인 측면을 넘어 다양한 인재들이 특정 분야의 전공 및 배경을 넘어선 과감한 이중교류가 부족하다는 점은 대한민국 창업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가령, 경영학을 전공하는 인재들이 자신들에게 없는 비교우위를 지닌 이공계 인재들과 교류하여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 분야 인재들이 너무 따로 논다거나, 전혀 다른 배경의 소유자들이 만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회적 플랫폼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대학교 내 다양한 전공의 소유자들이 학내에서 창업관련 프로그램 등 팀을 이뤄 의무적으로 이중결과도출을 훈련해 보는 교육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분명 큰 성과를 이루리라 생각한다.

2. 정부부처의 관료주의적 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1) 복잡한 증명절차

젊은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정부과제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을 때 그 절차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내용증빙 요청 서류가 워낙 많아 본업인 창업활동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이다. 특히 이러한 불만은 청년 창업인구 중 초보자에 해당될수록 요구되는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창업 본연의 활동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물론 기본적으로 창업가들에게 있어 이러한 행정절차나 내용증빙은 어느 정도 필요한 기초역량이라고 생각되지만, 적어도 청년 창업가들이 좀 더 체계화된 내용증명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창업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 창업가들에게 맞는 시스템 아웃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탁상공론에 기초한 대안을 내세우기 보다는 현장 속 젊은 창업가들이 겪고 있는 민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본다.

(2) 성과주의

정부부처 또는 관련 창업예산을 할당받는데 있어 성과주의를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지극히 근시안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창업가들의 역량과 잠재성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부처의 후원을 받는 기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청년 창업 평가 기준으로 크게 창출된 매출과 고용인원 등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상 양적인 측면에 집중된 평가기준으로 장기간 인내를 필요로 하는 창업이나 아이터들에겐 지극히 불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청년 창업가들의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다보니 창업 아이터 역시 단기적인 재무성과를 낼 수 있는 IT 서비스 등에 편중된다. 실제 창업 아이터 분야를 세분화 시켜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좀 더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

다.

3. 감시시스템 부재로 인한 문제발생

(1) 스펙(Specification)강화 형태의 단기 창업 성행

많은 청년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취업 시장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산점을 얻기 위해 정부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을 단순히 자신들의 이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우선 법인설립이 매우 쉬운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아이템으로 정부지원을 받아낼 경우 1~2년 단기사업을 수행한 다음, 이를 하나의 이력으로 정리하여 대기업 취업 후 법인설립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창업의 양적인 성장을 집중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정부방침을 많은 청년들이 역이용 하고 있는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정부 부처의 지원조건과 법인설립 후 의무유지기간 연장 등 엄격한 사전 평가 및 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명문대학교 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창업지원제도를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맞보기만 한 채 이력에 도움 될 만한 내용만 쌓이면 바로 대기업 취업으로 선회하는 사례가 많다.

(2) 검증되지 않는 멘토 및 지원금 사냥꾼 출연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멘토들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단순히 창업과정의 필요한 지식을 전수해 줄 뿐만 아니라 창업 자체의 첫발을 디디는데 있어 실로 큰 정신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멘토 중 정작 청년들의 창업정신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도움을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부족한 실력으로 단순히 청년 창업가들에게 훈수만 두거나 심지어는 창업 아이템을 가로채는 등 편법적 행위를 남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부처의 지원정책을 잘 알고 있는 전문 사냥꾼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금을 타낸다거나 창업재기 프로그램에서도 지원금만을 확보하는 편법 등을 남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냥꾼의 출연은 생각보다 만연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많은 선의의 청년 창업가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합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창업지원에 있어 연령 제한을 둔다거나, 편법적으로 명의도용으로 불법적인 법인설립 및 운영을 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명의를 빌려준 청년을 포함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V. 마무리

스타트업 붐은 지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클라우드 슈밥의 언급이 각광을 받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었다. 기존의 산업혁명 모델에 의한 발전

노하우와 관성으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더불어 각종 언론 매체를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청년 사업가 양성과 창업대책 마련 등에 분주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책입안자들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창업문화는 기존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 패러다임과 누적된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거 추격형 경제모델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양적발전모델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창업문화에 유효한 노하우가 아니다. 앞으로의 창업은 지극히 선도 형태의 모델을 취할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기초한 창업활동 발전 양상 역시 정책입안자들이 예상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시대성에 맞게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도 국가들의 외형적 요소만을 형식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세계 최고 창업선도 국가인 핀란드의 창업제도와 외부행사 등을 모방 및 유치하기 이전에 선도형 경제 발전 모델과 철학에 기초한 그들의 교육제도와 국민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보다 근본적인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2월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프랑스 내 창업열풍이 일어 투자 유치 금액이 경쟁국가인 독일과 영국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감안해야 할 것은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등의 논술 입시 제도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창업 마인드에 최적화된 창의성과 비판의식, 그리고 능동성이 탄탄하게 누적 및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경우 외관상 창업의 형태는 선도 국가들의 모형을 따라 어느 정도 갖추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창업에 근간이 될 만한 소프트웨어적 요소, 즉 창업 마인드 셋(Mind-set)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 창업문화는 진지한 사업적 시도보다는 대기업 입사를 위한 스펙으로, 정부 보조금을 쉽게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정부 관계부처의 업적 전시용도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지원제도가 갖춰져 있으나 여전히 청년세대 절반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창업을 양성한다는 포부를 그리기 이전에 그 이면에 깃든 시대착오적인 근본 뿌리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